

금강·경주대 등 13곳 부실대학 지정 ‘학자금대출 제한’

2021 재정지원가능대학 명단 발표
자율개선 207곳, 역량강화 74곳

교육부, 내년 5월 대학진단 착수
허위공시자료 제출 ‘엄정 제재’

4년제 일반대 7곳과 전문대 6곳 등 모두 13개 대학이 내년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으로 분류됐다. 이에 따라 해당 대학의 내년도 신·편입생은 학자금 대출이나 국가장학금 신청에서 제한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아 ‘2021학년도 정부 재정지원가능대학’ 명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 학자금 대출이 제한되는 대학은 총 13곳이다.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이 50% 제한되는 대학은 4곳이다. 이 가운데 4년제는 금강대·예원예술대 등 2곳, 전문대는 고구려대학교·서라벌대학교 등 2곳이다.

일반상환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이 전면 제한되는 대학은 9곳이다. 이 가운데 4년제는 경주대·신경대·제주국제대·한국국제대·한려대 등 5곳, 전문대는 광양보건대학교·서해대학·영남외국어대학교·웅지세무대학교 4곳이다.

교육부는 매년 다음 학년도에 재정지원 제한 조치가 적용되는 대학을 지정하고 유형별로 정부 재정지원 사업과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관련 제한

〈2021학년도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 명단〉

구분 (제한 범위)	학교 명		
	일반상환 50% 제한 (2개교)	금강대학교, 예원예술대학교	
4년제 (7개교)	일반상환·취업 후 상환 100% 제한 (5개교)	경주대학교, 신경대학교, 제주국제대학교, 한국국제대학교, 한려대학교	
	일반상환 50% 제한 (2개교)	고구려대학교, 서라벌대학교	
전문대 (6개교)	일반상환·취업 후 상환 100% 제한 (4개교)	광양보건대학교, 서해대학, 영남외국어대학교, 웅지세무대학교	

조치를 하고 있다.

교육부는 “2021학년도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수험생과 학부모는 이번 발표한 명단 중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이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이 제한되는지 등을 확인해 등록금 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재정지원제한 대학의 제재 기간은 1년이다. 올해 지정되면 내년에 입학하는 신·편입생들이 불이익을 받는다. 다만 교육부로부터 재정지원제한 판정을 받더라도 1년간 지표 개선을 통해 최저 기준을 대부분 충족한다면 제재는 해제된다.

교육부는 이날 2021학년도 정부 재정지원가능대학으로 선정된 281개 일반·전문대 명단도 함께 발표했다. 지난해와 비교해 9곳 늘어난 수치다.

최상위 등급인 ‘자율개선대학’에는 일반대 120곳과 전문대 87곳이 선정됐다. 자율개선대학은 정원 감축 여부를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역량강화대학’에는 일반대와 전문대 각각 36곳, 38곳이 선정됐다. 역량강화대학은 산학협력 지원사업 등 특수목적 재정지원사업에 참여가 가능하다. 학생들이 국가장학금을 받거나 학자금 대출도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됐던 창신대는 올해 지표 개선을 통해 역량강화대학으로 이름을 올렸다.

◆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실시 전 재정지원제한대학 우선 지정

교육부는 내년 4월 재정지원 제한 대상인 이른바 부실대학을 걸러내고, 5월부터 대학진단에 착수한다. 교육부가 이날 발표한 ‘2021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방안’에 따르면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는 진단 실시 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을 우선 지정한다. 앞서 2018년 진단에서는 평가 결과에 따라 ▲자율개선대학 ▲역량강화대학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I, II 유형)으로 구분했다.



재정지원제한 대학은 2021년 진단에 참여할 수 없고, 유형에 따라 재정 지원 사업 참여 및 국가장학금 등 정부 재정 지원에 제한을 받는다.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는 교육 여건과 성과, 행·재정 책무성의 주요 정량 지표 등을 활용해 절대평가 방식으로 지표별 최소기준 달성 여부를 평가한다.

대학책무성 지표의 경우, 대학 주요 보직자의 부·비리 제재 사안과 정원 감축 권고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한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평가 지표를 미충족한 것으로 간주된다.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은 미충족 지표 수가 3개인 경우 제한대학 I 유형으로, 4개 이상인 경우는 제한대학 II 유형으로 지정된다.

교육부는 허위 공시자료 제출 등 대학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대부분의 평가 지표가 대학 정보공시 자료 등을 활용하기

때문이다.

정보공시 자료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 해당 원 자료값 오류분의 최대 5배 범위 내 제재(페널티) 부과 후 재산출한다. 또한, 허위 정보공시 관련 부정·비리 사안 발생 시, 최대 3년 범위 내 재정 지원제한 조치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내년 실시하는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결과를 반영한 2022학년도 재정지원가능 대학 명단은 올해보다 약 4개월 앞당겨 내년 4월경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재정지원 제한 등의 조치는 2022학년도 1년간 적용된다.

◆ 코로나19 여파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지표 조정

교육부는 내년 5월부터 8월까지 실시할 예정인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의 지표를 일부 보완했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교육활동 및 온라인 수업 확대 상황을 고려해서다.

이에 따라 기존에 오프라인 강의만 반영했던 ‘재학생당 총 강좌 수’, ‘강의 규모의 적절성’ 지표는 오프라인 강의와 더불어 온라인 강의도 함께 포함해 산출한다.

▲학생 학습역량 ▲진로·심리상담 ▲취·창업 지원 ▲산학협력 활동 관련 지표 등 학생 지원 영역의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정량적 실적은 2020학년도 1학기에 한해 제외한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기업 채용 꺼린다… 채용계획 11년만에 최저

고용부, 상반기 사업체 노동력 조사
2~3분기 채용계획인원 23.8만명
전년 동기대비 1.3만명 5.1% 줄어

국내 기업의 2~3분기(4~9월) 채용 계획 인원이 1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 불확실성 증가로 기업들의 채용을 꺼리고 있어서다.

3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0년 상반기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를 보면, 국내 상용직 5인 이상 사업체의 올해 2~3분기 채용 계획 인원은 23만8000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1만3000명(5.1%) 감소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인 2009년 1분기(20만8000명) 이후 가장 작은 규모다.

올해 1분기(1~3월) 5인 이상 사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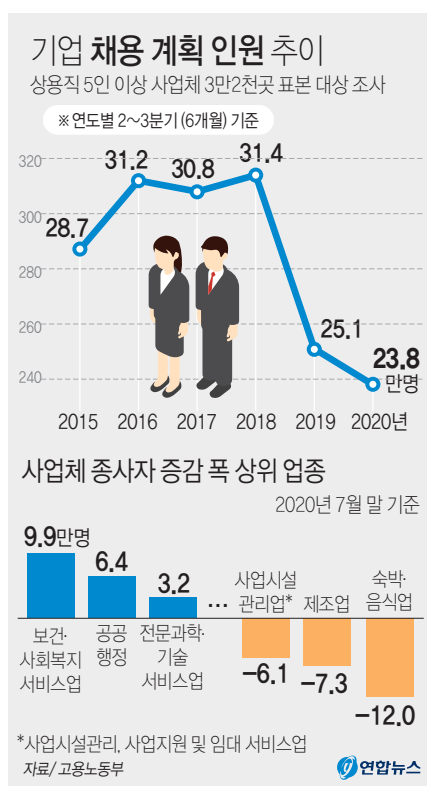
의 구인 인원은 79만3000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3만2000명(3.9%) 감소했고 채용 인원은 73만4000명으로 1만4000명(1.9%) 줄었다.

노동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개학연기, 학원 휴업, 관광객 감소,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영향을 받은 결과라고 분석했다.

사업체의 적극적인 구인에도 채용하지 못한 ‘미충원 인원’은 5만9000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1만7000명(22.7%) 급감했다. 코로나19 사태로 구인 자체가 위축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사업체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인원을 의미하는 ‘부족 인원’ 또한 지난 4월 1일 기준으로 22만3000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1만2000명(5.1%) 줄었다.

/한용수 기자 hys@



소비 4개월만에 하락… 투자도 감소

통계청, 7월 산업활동 동향

산업생산 소폭 증가… 증가폭 둔화
재난지원금·개소세 인하효과 줄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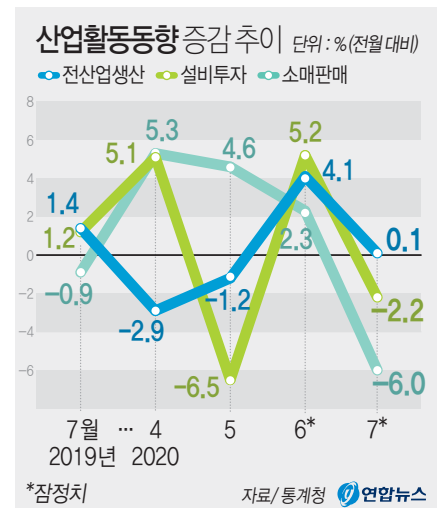
회복세를 보이던 소비가 4개월 만에 다시 꺾였다. 산업생산은 소폭 증가했으나 증가폭이 둔화됐고, 투자도 감소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 정책효과가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됐다. 8월 중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향후 산업활동동향 지표도 나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全)산업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은 전월대비 0.1% 증가하는데 그쳤다. 전산업생산은 5월까지 5개월 연속 감소하다 6월 4.1% 상승에 이어 두 달 연속 늘었지만 증가폭은 확 줄었다.

그나마 광공업 생산이 1.6% 증가해 전산업생산 증가세를 끌어올렸다. 광공업 중 제조업 생산은 반도체, 전자부품 등에서 감소했지만 자동차, 기계장비 등이 증가해 전월 대비 1.8% 증가했다. 6월(7.4%)에 3개월 만에 증가로 돌아선 뒤 두달 연속 늘었다.

제조업 가동률지수는 2.6% 증가했고,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70.0%로 전월보다 1.8%포인트 올랐다. 제조업 재고율(재고/출하 비율)은 116.0%로 전월 대비 1.7%포인트 떨어졌다. 전산업생산 증가폭 둔화에는 공공행정(-8.4%) 급감이 큰 영향을 미쳤다.

통계청은 “코로나19로 미루던 업무를 6월에 재개해 큰 폭으로 증가한 기저



효과로 7월에 공공행정이 감소했고 이에 전산업생산 증가세가 둔화됐다”고 설명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0.3% 늘었다. 예술포·스포츠·여가(7.7%), 숙박·음식점(2.3%), 금융·보험(2.2%), 정보통신(2.2%), 부동산(1.8%), 운수·창고(1.2%) 등이 증가했다. 반면, 교육(-1.7%), 도소매(-1.4%) 등은 줄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은 전월 대비 6.0% 감소했다. 이는 지난 2월(-6.0%) 이후 5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이다. 4월(5.3%), 5월(4.6%), 6월(2.3%) 석달 연속 증가하다 4개월 만에 감소로 돌아섰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폭이 7월부터 축소됐고 긴급재난지원금이 5~6월 소진되는 등 정책효과가 감소한 영향으로 보인다. 승용차 등 내구재(-15.4%), 의복 등 준내구재(-5.6%), 의약품 등 비내구재(-0.6%) 소비가 일제히 감소했다.

/한용수 기자

“매입 자사주, M&A 등에 활용될 것”

>> 1면 ‘SK그룹 지배구조…’서 계속

SK텔레콤 관계자는 “그룹 지배구조 문제와 관련 없는 사항”이라고 선을 그으며 주가부양 측면을 강조했지만 증권가에서 보는 시각은 다르다. 중간지주사로 변환해 SK하이닉스의 지분을 늘리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오대만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매입된 자사주는 소각되지 않고 M&A나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지분 교환 등에 활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기에 SK텔레콤을 투자회사와 사업회사로 인적분할한 후 투자회사와 SK를 합병해 자연스레 SK하이닉스를 SK의 자회사로 만드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SK텔레콤 자사주 매입에 대

한 시장의 관심이 취득 효과보다 그룹 내 지배구조 변화에 향하는 이유다.

정지수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인적분할은 비용 효율성과 기업가치 증대 측면에서 SK의 최선의 선택지”라며 “최근 SK와 SK텔레콤의 공격적인 자사주 매입도 지배구조 변화를 위한 포석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장 지배구조 개편이 일어나진 않겠지만 최근 증시 분위기가 주가가 먼저 반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송태화 기자 alvin@